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

(강 선 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149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10.

발 의 자 : 강선영, 홍재희, 김성한,
신찬호, 고찬양

1. 제안이유

상위법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일부개정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이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함.
이에 가족해체와 빈곤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“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”라는 사회복지 가치 실현에 다가가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공영장례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2조)
- 나.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자, 지원방법,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 등을 규정함(안 제5조~8조)
- 라. 공영장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례업체, 민간기관,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협조부서 : 복지정책과

다. 입법예고 : 2023. 11. 10. ~ 2023. 11. 14.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“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”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영장례”라 함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.
2. “연고자”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.
3. “저소득층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,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영장례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자)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구 내에서 사망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한 무연고 사망자. 다만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사망 시,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거나 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

3. 사망 시,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망자

4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·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지원방법)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

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례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.
-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,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비용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내용)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.
- ③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)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제5조제1호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신청서 제출이 면제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직접 장례를 시행하거나, 제9조에 따라 대행할 장례업체,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업무의 대행) ① 구청장은 공영장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업체, 민간기관,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점검)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래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
제11조(환수) 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래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공영장례 지원 신청서						처리기간 즉시
신청인	성명 (상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		사망자와의 관계	
	주소			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		장례일자	
사망자	성명		생년월일			
	주소					
	사망일시	년 월 일 (:)		사망원인		
장례 수행자	성명 (상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		연락처	
	장례일자			장례방법		
지급 계좌	금융 기관명		예금주		계좌번호	
<p>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p>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</p>						
구비 서류	1.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. 지원요청 내역서					수수료 없음
<p>‘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’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,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예 <input type="checkbox"/>아니오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></p> <p>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실명 확인</p> <p>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장례처리 능력 여부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</p> <p>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5년</p> </div>						

□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